

한·브루나이, MOU 3건 체결

식품가공·기술·혁신 자원 투자협력 강화키로

한국과 브루나이 정부는 11일 과학 기술과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사날 불키아 국왕은 이날 오전 11시15분(이하 현지 시각)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슐리브 가완 '이스타나 누를 이만'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두 정부 간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양국 장관들은 ▲투자협력 MOU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 3개 분야에 서명했다.

투자 협력 MOU는 양국이 자원, 기술·혁신 산업, 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브루나이 측에서는 아민 리우 압둘라 재무경제부 제2장관이 서명했다.

특허 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MOU는 브루나이 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PCT) 하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약이다. 우리 측에서는 박원주 특허청장이,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반다르스리브가완에 위치한 브루나이 왕궁 '이스타나 누를 이만'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양해각서 서명식을 마친 후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브루나이 측에서는 맛 수니 에너지 인력산업부 장관이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아세안 회원국 중 7번째로 우리 특허청이 ISA로 지정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가 국제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 특허청은 현재 17개국이 ISA로 지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협력 MOU는 양국이 과학 기술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 정책, 식품 과학,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정보교류 등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 측에서는 윤현봉 주 브루나이 대사, 과 브루나이 측에서는 맛사테즈 에너지인력산업부 부장관이 서명했다.

/뉴시스

'인권보호·대집행 실효' 다 잡는다... 65년만에 행정대집행법 대수술

정부가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을 재개하고,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의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쟁점과 '착지안 체감도 높은 시책' 위주의 신규발굴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숨어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 한다.

행정대집행이란 특정 시설이나 개인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철거 등이 포함된다.

대집행 전 10일 이상 최소 이행기

간을 부여하고 거주자 보호와 국제 절차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시 집행을 의무화하되 폭염·한파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집행 시기를 미룬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정대집행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7월 말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중 국회에 제출한다. 1954년 이 법이 제정된 후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인권 보호와 질서라는 2가지 이슈가 충돌하는 행정대집행법이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현실과 맞닿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며 "똑같은 현상(대집행)을(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행위를 통일화하는 취지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경찰관의 적정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경찰 위원회에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등이 참여하는 '유해봉환 유관기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뉴시스

록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나선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기념사업은 보다 적극 추진한다. 독립운동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유공자를 발굴·선양하는 식이다. 남북 공동행사와 100주년 기념 평화공원 조성 등 미래 100년 준비사업도 병행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 제 해결로 우리 사회의 아픔도 치유해 나간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포괄적 진상규명 기반을 마련하고,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해 시민사회에 환원한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태평양전쟁 격전지(타리위) 노무자까지로 유해봉환 범위는 늘린다. 민관 합동으로 유해봉환 로드맵을 만들고, 외교부·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등이 참여하는 '유해봉환 유관기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뉴시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 제공에 최선을"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시험연구 결과 발표... 양축농가 질병지도 등 현장솔루션으로 활용

전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18년도 시험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농가 질병관리 및 축산기술 보급 등에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연구사업은 가축질병, 축산물 위생 및 우량종축 생산 등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조사·연구를 통한 업무기술 개발 및 양축농가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번 과제는 2018년도에 선정된 6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로 가축질병과 관련된 5개 과제(가금 3, 소 1, 토끼 1) 및 혈통개량을 위한 한우 수정란 이식 에 관한 1개 과제이다.

본 연구결과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 현장지도 시 우선적으로 개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시험한 결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계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및 레오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률 조사를 통해 일령별, 계질별 농가 방역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도토장에 대한 토끼 질병 감염실태 조사 및 소 큐열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차단 및 농가 사양관리 지도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축산시험장에서 발표한 초음파화상진단기를 이용한 수정란 이식 연구결과를 통해 살아있는 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란하는 직접 난자채취기법(OPU)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2018년도 연구사업 결과는 축산 농

가 교육 및 기술 지도를 통해 농가에 홍보할 예정이며 논문집 제작 및 관련 학회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동물 방역, 위생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조선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9년에도 6개 과제의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사양관리 개선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에서 필요한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만이 '최선'

전북도, 양돈농가 특별관리 강화

전북도는 양돈 축산 기반을 위협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관리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100%에 이르며,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ASF는 제1종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는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여행객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그간 돼지농가의 외국인근로자 487명을 파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대책에 대한 외국인(6개국) 홍보물을 배포하고, 농장주가 직접 외국인근로자를 교육토록 했다.

남은음식물급여 29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바이러스 검사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29농가 중 22농가는 사료로 전환하여 사육하고, 나머지 남은음식물급여 7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80℃ 30분 열처리하여 급여하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왕래하는 공항·선박의 남은 음식물이 도내 축산농가로 유입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전북도는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이달부터 양돈농가별 담당관제의 시행과 질병유입 위험농가에 대한 연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는 도내 양돈농가에 중앙과 지방의 합동 담당공무원 2명을 지정하여, 담당농가를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위기상황과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등을 지도하고 연중 바이러스 검사는 질병유입 위험농가(법발축산물 반입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밀집지역농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114호에 대해 질병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 환경분야 민관합동 감시체계 구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전북도는 11일 전북도청에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각종 환경오염 취약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할 2019년도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점검반을 통해 환경사업장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환경분야에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김호주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대기오염으로 도민들이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11일 전북도청에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각종 환경오염 취약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할 2019년도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